

尹,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 수순... '정치력 실종' 우려감

윤 대통령, 양곡법 등 2건 거부권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 법안취지·입법부 기능 상실 지적 민주당 "尹, 국회 의결 존중해야"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저지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는 가운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면서 진영논리에 우선한 '정치 실종'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쌀 초과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조건을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시킨 '간호법 제정안' 2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한 뒤 표결에 들어갔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을 반대해오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결 투표까지 거쳤으나, 야당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에 부친다는 입장이

나, 의결 정족수 확보는 힘들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날(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처리된 일명 '노란봉투법'도 추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쟁점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표결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본래 법안은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입법부의 조정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는 경우'로 공공매입 조건을 명시해 봤으나 여야의 지난한 대립 끝에 이 기준을 완화하며 농민단체 등 현장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출범 2년 차 초반까지 2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임기 중 거부권 행사 횟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45건,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4건, 박근혜 2건, 문재인 0건으로 주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거부권 행사가 집중됐다.

민주당은 대의제 기관인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어느 법안이든 국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 설사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 공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 누리호 발판... KAI와 '차세대 발사체' 경쟁

국내 민간기업 최초 우주사업 참여 2032년 달, 2045년 화성 착륙 계획 나로호 4차부터 모든과정 참여하고 6차부터 일부제외 모든작업이 목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나서면서 국내 우주 산업도 정상 궤도로 오르는 모습이다. 그 중심엔 체계 종합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기존과 다른 점 중 하나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 관리와 발사 공동 운용 등 과정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끝나면 누리호보다 더 큰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주도할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누리호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가운데, 장기간 우주 사업을 이어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민간 기업이 국내 우주 사업에 참여한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이다. 종전까지는 정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체 설계부터 모든 과정을 도맡았지만, 지난해 10월 한국형 발사체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하고 발사를 함께한 것.

정부는 민간 우주 개발이 본격화한 글로벌 산업에 발맞추기 위해 우주 발사체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민간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도 세웠다. 독자적으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서는 우주 산업 규모가 현재 500조원 수준, 2030년에는 1000조원에 달하고 2040년에는 1500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X를 비롯한 민간 우주 개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정부도 민간 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한화는 일찌감치 우주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꾸준히 육성해왔다. 기존엔 엔진 기술을 토대로 지난 누리호 엔진을 생산 및 공급하기도 했다.

이번 발사에서는 일단 참관을 통해 항우연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중점을 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직원 11명을 누리호 3차 발사 준비와 운용과정에 참관토록 해 기술을 습득했다. 발사지휘센터에서 2명이 발사준비부터 임무통제와 지원 등을, 6명이 발사체 준비와 시험 및 운용 등을 참관했다. 발사대에도 3명이 발사체 점검과 추력벡터구동기 작업 등을 배웠다. 발사 당일에도 관제센터에서 직접 발사 과정을 확인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음 나로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5톤액체로켓엔진.

4차 발사부터는 참관뿐 아니라 발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6차부터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작업을 직접 하게 목표다. /김재용 기자 juk@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사용자부담금 10% 지원 (3년 한시) | 수수료 0원 (5년 한시)

푸른씨앗심고! 희망 미래 열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